

# ‘검수완박’ 11개월만 결론...논란소지 여전

### 양향자 사·보임, 민형배 탈당 등 문재인 정권 말 법안 통과 ‘진통’ 쟁점별 희비...갈등 이어갈 듯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검사의 수사·소추권한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당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쟁점별로 희비가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만큼 이번 현재의 결정 이후에도 각자 정당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검찰의 반발  
검수완박 법안(검찰정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년 전부터지만,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내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것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펴낸 책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검찰 조직에 유감을 명확히 드러냈던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후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섰다.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도록 했고,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1년 검찰의 수사권을 ‘안전히 박탈’ 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나섰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심한 듯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3월 이후로 민주당이 서둘러 드라이브를 걸었다.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돼 그 전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민형배 위장탈당, 법사위 문턱 통과  
비록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했다.

안전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수석 우세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여당 3명과 여당을 제외한 3명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조정위에서 4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안전조정위 의결을 위해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2021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을 2022년 4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으로 평가받던 양 의원을 법사위 안전조정위에 무소속 의원 뒤편으로 배치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전조정위원으로 들어가 결국 검수완박 중재안을 의결시켰다. 이날 현재가 인용한 권한 침해가 이 대목이다.

야당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려 했지만, 국회는 결국 그해 4월 30일 검찰정법 개정안을,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뒤에도 끝나지 않은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싸움은 국회 밖에서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사위 안전조정위를 통과한 직후인 2022년 4월 27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법안이 분회

의로 넘어간 4월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그해 6월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 기관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0년 첫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래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현재가 연 공개 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정면 충돌했다.

장관 후보자 때 검수완박 입법을 ‘야반도주’라 비판했던 한 장관은 공개 변론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수사권은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신속한 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현재는 입법 11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선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3월28일)도 현재가 선고를 서두른 배경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제

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

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 30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여야는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개혁위는 전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

지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외에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2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치고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원위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 과정에서 일정지 사를 미뤄졌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내달 7일 선출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4월 8일 끝나는 걸로 돼 있다”면서 “4월 7일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당 대표와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개마될 전망이다.

현재 김학용(4선), 윤재옥(3선)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외 중진 중에서 윤상현(4선), 조해진(3선) 의원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3선의 박대출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박 정책위의장 지명에 대해 협의했고 저도 동의해서 의총에서 만장일치 인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